

제428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5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장 및 위원 개선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요청안
4.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6.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7.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8.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교육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2. 소위원장 및 위원 개선의 건 2
- 간사 및 소위원장(고민정) 인사 3
3.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요청안 3
4.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5.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3
6.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7.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4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8.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4
 - 가. 교육부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 선임,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의결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이호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광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교육위원회에서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4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문정복 위원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시게 됨에 따라서 새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고민정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대식 위원 검증 없이 통과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외로 굉장히 큰 지지를 통해서 선출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문정복 간사님,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제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박수)

이렇게 뜨거운 박수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2. 소위원장 및 위원 개선의 건

(10시35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고민정 위원님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고민정 위원님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진선미 위원님을 대신해 김준혁 위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민정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및 소위원장(고민정) 인사

○고민정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야 간에 협의된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키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조정훈 간사님 잘 돕고 또 김영호 위원장님 잘 모셔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협의된 법안만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간사님,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요청안

4.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7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0일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2일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무위원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등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려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청문회 실시계획에 관해 발언하거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지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10시39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모두 43개 기관 대상 1075건입니다.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동안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에 출석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8.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교육부 소관

(10시40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부 결산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목표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최은옥 교육부차관 나오셔서 결산 등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첫째,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9조 4282억 원, 수납액 19조 425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둘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액 111조 1634억 원, 집행액 106조 4416억 원, 이월액 155억 원, 불용액 4조 7062억 원으로 95.8%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개요 4쪽입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비 2103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있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3792억 원을 조달하여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융자 및 행복기숙

사 사업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1조 5650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교육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5일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 김영호**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나오셔서 결산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결산에 대해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첫째, 세입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14억 1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3억 8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 4900만 원, 불용액은 11억 8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2.2%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결산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위원장 김영호** 이배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등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노트북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 예정인 예결소위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꼭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추가질의는 회의 상황에 따라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의는 김문수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차관님 축하드리고요. 공부 많이 하고 오셨어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열심히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워낙 베테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결산보고에서 영유아보육료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비 2103억 원 잘 집행했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김문수 위원** 감사드리고.

그러면 내년에는 만 5세에서 만 4세까지도 무상보육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 예산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결산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 전체 각 기관별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맞지요?

교육부에 총 4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물여덟 곳은 미달성이고, 특히 2년 연속 스물세 군데가 장애인 물품을 목표대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1개 기관은 달성을 했습니다. 또 잘한 데도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본부 소속기관은 다 잘돼 있고 다만 주로 국립대학들도 목표 달성한 곳도 있고 또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해당하는, 거점국립대라고 하지요, 각 광역당 주요 국립대입니다. 그런데 2년 연속 미달한 강원대 부산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가 목표를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고, 또 글로벌대학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2년 연속 7개 대학이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데도 3개교가 연속해서 목표 달성을 못 했고 또 특수학교도 연속 2개 학교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아마 이게 어떤 제재 방법이나 처벌이 없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장애인 물품을 제도로 구매해 주는 것,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디에서도 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이걸 하라고 하기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개선 방안은 뭡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을 달성하는 것은 저희 교육기관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달성한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달성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 2025년도에는 목표비율이 1.1%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인데, 2년 연속 달성을 못 했거나 한 기관들에 대해서 월별 점검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해서 올해는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왜 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아무래도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를 함에 있어서 좀 불편

함이 있다든지 그런 게 현장에서는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도 목표 달성하는 그 당위성이 훨씬 더 큰 것인데 그것을 주지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맞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 중에서 질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맞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또 목표를 달성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핑계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재 방안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목표 달성 못 하면 다른 예산을 그만큼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원이 급속히, 물론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4년 연속 3641명이 줄었고 또 중등 같은 경우에는 6년 연속 7273명의 교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지역·지방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줄면서, 과목은 12개 과목이 그대로 있는데 교사가 8명밖에 없어 가지고 전공이 아닌 분들이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더 지역에서 대도시로 떠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가지고 교원 감축을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선진국에 걸맞을 정도로 지금 확대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의료보험이나 어르신 보험들은 선진국에서조차도 찬사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잘 진행됐는데 장애인 정책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 정책의 시작은 교육에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이 교육 분야 만큼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장애인 정책만큼은 교육부가 정말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장애인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 좀 철저하게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차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결산과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로 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조금 여쭙보고 싶은데요.

최근의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인상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소위 ‘횡재세’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로 인해서 교육세가 0.5%에서 1%로 늘어남에 따라서 적어도 세수가 1.3조 원 정도는 확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것이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사업을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재원 자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너무나 적기 때문에 투입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 정책이 가고 있고요. 금융·보험업자 교육세가 딱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저희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돼야 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전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세라고 하는 게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하고 나면 고특회계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특회계를 늘리겠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난 정부에서 세수결손이 있을 때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금 등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좀 더 불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고요. 그렇지만 고등교육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일단은 교육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늘려 나가겠다는 방향을 지금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전 위원 지금 정책 하는 입장에서는 추가 세수이기 때문에 추가 세수로 고특회계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초·중등 교육을 하는 입장들에서는 ‘아니, 어려울 때 우리가 상당히 희생을 했는데 별 좀 들면 우리도 같이 별을 쬌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설득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또 정말 50 대 50을 유지하지 않고 고특회계를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꼭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예산이라기보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주셨습시다만 그러나 현재 예상되고 있는 1.3조 원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예산으로 3조 원 정도 예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증세된 교육세는 2027년부터 적용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해야 될지는 저희가 굉장히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전 위원 지금 이게 예상되는 3조 원보다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좀 시나리오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RISE 사업에 보니까 이것을 5극3특, 다시 말해서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해서 RISE 사업을 5극3

특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RISE를 재구조화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결국 RISE를 받아 가는 대학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RISE라고 하는 게 광역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여러 광역권으로 묶였을 때 그 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걱정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17개 시도별로 구성돼 있는 RISE 체제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5극3특으로 체제가 개편이 된다면 그것과 다르게 저희가 17개 시도만으로 이렇게 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방향은 그렇게 잡았는데 그 과정에 대학의 지원 수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대학이 생겨난다든지 이러한 것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우리 차관님께 질의하기 전에, 오랜만에 허동현 위원장님 뵈서 반가워서 인사 좀 드리면서 간단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감 할 때 국사편찬위원회 수장고가 전기세가 없어 가지고 반박에 항온항습을 못 한다고 해서 그때 전기료나 기본운영비를 제대로 좀 지원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그 중요한 귀한 유물을 잘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앉아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준혁 위원** 예.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사실 정을호 위원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료를 보존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항온항습고를 켜기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도서관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전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전 측에 연락을 해서 교육용으로 좀 전환해 달라고 해서 전기를 교육용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지금 전기요금이 좀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서 중요 사료고는 제대로 켤 수 있게, 그렇지만 24시간까지는 제대로 다 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장서각이라든가 이런 데도 항온항습고를 갖추고 있지만 전기료 때문에 풀 가동은 못 하고 습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가동을 하고 있고, 급한 경우에 진짜 중요한 사료고는 지금 항온항습고를 두 곳 더 설치했거든요. 거기는 지금 제대로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충분히 말씀 이해하고요.

차관님, 대한민국 K-컬처 K-문화가 세계적인데 그 기본 바탕이 바로 역사·문화 사료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자 나라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24시간 항온항습을 못 한

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서각도 그렇고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안내, 작년에 제가 광화문 현장 가서 보니까 겨울에 전기난로 2개 켜고 있더라고요. 그거 좀 바꿔 달라고 했는데 올해 바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더 긴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그러면 차관님께 아주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대학 총장들이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2유형 폐지를 건의했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정확히 폐지를 하기에는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4조 7000억이나 되는 국가장학금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같은 걸 마련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생들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 효과가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거고, 2유형의 올해 예산이 260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저희가 등록금 인상률이라든지 각 대학의 저소득층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학에 배분을 하는데 결국은 대학에 가서는 그것도 국가장학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는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국가장학금이 1유형 같은 경우는 안정되게 지원되는데 2유형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소득 자녀들도 이것을 받아서 오히려 좀 낭비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나머지 대학의 여러 사업들, RISE부터 시작해서 글로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 지원이 국가장학금 지원 때문에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학의 효율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균형과 그리고 합리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말씀하신 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지금 거의 한 10여 년 동안 5조까지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것이 저희 고등교육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김준혁 위원** 34%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던데?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추가 늘어나는 예산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데 더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것 중요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예전에 했던 질의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시고 또 문제점도 지적하는데요 교육부가 그런 문제점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계셨다가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예산이 많이 들든지 제도와 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다시 교육부에서 국회에 요청해야 되지만 오늘 전기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교육부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육부 공직자분들께서 여야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동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 지적을 하면 그때마다 딱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고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이배용 위원장님, 임기 얼마 남으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9월 26일이 임기 끝입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이제 딱 한 달 남으셨는데.

제가 국교위원으로 1년 같이 있었잖아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정말 훌륭한 국가교육위원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합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감사합니다.

○**정성국 위원** 3년간 국교위를 이끄시면서 있었던 소회를 한번 여기서 밝혀 주시면 어떨겠나.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 어느 정도 1차 안, 2차 안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기가 출범하면 또 이어서 아마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완성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어서 한 60회에 걸쳐서 본위원회도 했고 또 많은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진행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또 1기에 기초는 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합의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합의된 내용 중에서 표결까지 간 게 몇 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기억하시는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가 59차까지 지난번에 했을 때 표결을 한 것은 두 번뿐

이 없습니다. 다 합의로 결론을 냈고요. 또 저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또 위원님들도 많이 의견이 달라도 마지막에는 다 합의해서 지혜롭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정성국 위원 예, 그 실적 자체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교위원장을 그만두시더라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더 헌신해 주시기를 저는 또 부탁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감사합니다.

○정성국 위원 차관님, 요즘 고교학점제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혹시 윤리적 딜레마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이게 왜 나왔느냐면요 학점 미이수제 운영 때문에 최소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정말 선생님들이 미이수를 시키는 부분 그리고 보충 지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쉽게 내거나 이래 가지고 어떻게든지 미이수 안 나오게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들, 고등학교에서 미이수가 나온다는 자체에 대해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윤리적 딜레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취지가 좋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인데 여러 가지 저희가 여건을 갖추는 것에 충분하지 않아서 현장이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 특히 고등학교에서 유급 또는 미이수 이런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정성국 위원 그리고 학생들 중에,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사회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충 지도를 하게 된다 이런 게 선생님들도 괴롭지만 그 보충 지도를 받는 학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하튼 이렇듯 저렇듯 좀 옆의 친구들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 이 학생들에게 진로를 더 열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축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닐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과연 지금 이렇게 미이수 처리로 해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 특히 학부모 민원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 아이가 왜 미이수냐?’ 이것 굉장히 좀 민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또 현장 선생님들도, 교원 3단체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미이수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게 78%가 나왔어요. 과연 이게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서 이런 것일까? 아니라 보거든요. 이 제도가 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고교학점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윤리적 딜레마, 특히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있는 이 미이수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하시고 현장 점검하시고 또 현장 가 보시고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깊이 고민해서 대책을 단기 대책 그리고 또 국교위랑 협의를 해야 되는 장기 대책 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교학점제, 정말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데요. 정성국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좋은 취지와 달리 지금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특히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어떤 컨설팅 또 심리적인 안정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박성준 위원입니다.

차관님,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 좀 들어 보셨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박성준 위원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뉴라이트 역사관에 의해서 교과서 논쟁이라든가 건국절 논쟁이라든가 친일 논란, 친일 인사에 대한 재평가 또 식민지 근대화론, 독재정권을 옹호하고 민주화운동을 축소하고, 특히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서 이 역사가들이 뚜렷한 입장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역사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준 위원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공직자의 얘기 또 역사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선비라고 하는 것은 들 자리와 날 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모셨던 사람과 역사관을 같이하는데 그 역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이분들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민전 위원 뉴라이트가 아니에요.

○박성준 위원 질의하는데 들어오지 마세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역사 관련 기관장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지금 제가 답변 기회를 좀 드릴게요.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님,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도 끊임없는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러날 용의 없으세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지금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이런 인사권자, 그러니까 정무직이니까 그런 저기는 정책 펴는 데 어긋나니까 물러나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 제가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학자는 사실은 글과 논문, 책으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낸 많은……

○박성준 위원 이 자리에서 그것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아닌데 뉴라이트라고……

○박성준 위원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충분히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이라든가……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작년에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요. 학계에서 저는 뉴라이트로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박성준 위원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님이 지난 국정감사 때, 윤석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로서 정확한 그 입장을 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기관장으로서 제가 평가를 못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박성준 위원 기관장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사편찬위원장이라면 대한민국 역사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갖고 그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학자로서는 제가 탄핵돼야 마땅한 일을 했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준 위원 기관장이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개인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박성준 위원 탄핵돼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써 입증을 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학자로서, 계엄은 우리가 현대사를 같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저는 학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준 위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도 그렇고 이 명언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예, 저도 강의할 때마다 그것 인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이 내란과 관련해서 기관장으로서 역사가로서 정확한 입장도 못 내는 분이 윤석열 정권과 같이 갔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정권이 몰락하고 윤석열이 이렇게 구속된 상황에서 그와 같이했던 사람들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게 선비의 길 아닙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기관장으로서 평가를 못 냈던 이유가 그때가 재판이 열리기 전이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법적으로 나오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박성준 위원 아니,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역사가로서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 상황을 봤고 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그러니까 학자로서 역사가로서의 평가를 물어보셨을 때는 제가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역사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역사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관 없이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합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그러니까 학자로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역사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역사 5000년 역사의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그만큼 연구를 했다고 하면, 윤석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하는 국사편찬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뉴라이트였던 박지

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라든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차관님, 극우 성향 역사관 교육으로 문제가 된 리박스쿨이 스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 단체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극우 성향 역사교육을 하고 또 늘봄학교 강사 양성까지 하면서 교육시설 행세를 해왔지요.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상 인가받지 않은 시설이 ‘학교’ 명칭을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런 곳이 리박스쿨뿐만이 아닌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학생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공산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편향된 교육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잘못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기관을 시민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에 고발을 했는데 석 달 뒤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학교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또 수업료도 받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전국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니 5년간 점검한 교육기관이 예순아홉 곳, 이 가운데 행정처분까지 받은 시설은 여덟 곳에 불과했습니다. 학교가 아닌데 학교라는 명칭을 써도 어느 교육청은 그냥 고발하고 어느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끝입니다.

지금 교육부가 전국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가 완전히 100%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실태를 좀 알아야 이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게다가 2014년에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을 교육부가 이미 했었는데 그때 학교 명칭 쓰거나 국제학교 형태 운영, 종교 편향 교육의 위법 사항으로 적발된 곳들이 경기도교육청 14개의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아보니 10년 전에 적발된 시설들이 여전히 불법으로 학교 명칭 쓰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교육시설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는 건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가 점검을 했어도 여전히 되고 있는 걸 보면 대책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고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백승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편향된 교육시설도 문제인데요 국제학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비만 수천만 원을 내면서도 학력 인증도 되지 않는 그런 미인가 교육시설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비공식 통계로는 국제학교라고 하는 시설들만 130개, 여기에 다니는 재학생 수만 2만 6000명이라고 하는데요, 추정상. 이 중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은 전국에 38개뿐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교육부 국가시책 특교 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보면 편·불법 학원 운영 근절 지원 사업, 이 사업이 A B C D E 중에 E등급을 받았습니다.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4세 고시 또 7세 고시처럼 어떤 영어학원이나 또 프렙 스쿨(prepschool)처럼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지도 점검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런 프렙 스쿨들이 국제학교나, 미인가됐지만 또 국제학교인 그런 곳들로 진학하기 위한 사실상 사전 코스라는 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교육부가 편·불법 학원 운영 근절 지원 사업, 이 사업 제대로 운영했다면 당연히 미인가 교육시설들 전반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조사할, 파악의 필요성을 느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렇지요.

물론 뭐 미인가된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종교, 다문화, 국제교육, 이런 공교육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 범위를 넘어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이 ‘공산국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하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회적 문제를 교육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관님, 올해 안에 이런 미인가 국제학교 또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강력한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규정이나 법을 개정할 것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재를 그냥 할 게 아니라 좀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재를 대책을 마련해야 우리 대안교육이 본래의 취지 살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대응 계획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최은옥 차관님, 업무 파악 좀 하셨습니까? 파악할 것도 없지요, 계속 진행해 왔으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사업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김대식 위원** 이게 최근 4년간 수강 추이를 보면 매년 수강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통계 자체를 보니까 2021년 3만 8712건에서 2022년 1만 8181건, 2023년 2만 7435건 잠깐 반등했다가 2024년도에는 2만 5254건으로 다시 줄어든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

단 말이지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2021년 604건에서 2022년 372건, 2023년 235건 그리고 2024년에 147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강좌가 갈수록 이렇게 외면받고 있으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세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K-MOOC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좌 수를 거의 2배로 늘려서, 그러다 보니 수강생은 기존 수강생에다가 약간의 유입이 있는데 강좌 수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 강좌당 수강생은 낮아진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콘텐츠도 저희가 좀 더 수강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콘텐츠로 잘 제작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강좌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계속 늘리는 건 좋아요. 늘리는 건 좋은데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을 성공시키고 나서 또 한번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도 보면 K-MOOC 운영비에 156억이 들고 국내외 교양강좌에 40억, 국내외 석학 강좌 15억 그다음에 디지털 교양강좌 12.5억, 시니어 지식기부 강좌에 12.5억(12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고 수강자가 계속 지금 하향곡선이고 하향 강좌가 1년에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두 자리 숫자로 그치는 상황이면 굉장히 지금 우리 교육 전문가들로 봐서도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들이,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쓰고도 이렇게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성과와 이런 것을 좀 평가해서 가지고 개선할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어떻게 개편을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을 늘리고 빼고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K-MOOC 사업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또 해외에 많이 파견이 돼서, 우리의 아주 좋은 강좌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 보급하고. 지금 K-컬처라든지 K-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콘텐츠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좀 개선을, 우리 최은옥 차관님이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이 오시고 이러면, 장관은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차관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최 차관님이 쪽 교육부에서 성장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한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집중해 줄 것은 집중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K-MOOC가 그동안은 양적인 확대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양적인 성장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 말씀 받아서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년도 공개강좌 콘텐츠 이런 사업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내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42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요. 그중에 조금 특이사항 하나는 석학 강좌가 올해 25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질과 수강생 면에서 좋은 강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도 넣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게 실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선택과 집중으로 좋은 강좌는 아주 더 계속 육성하고 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좀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안녕하세요?

정을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집행 관련해서 잠깐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의원실은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 학교안전 사고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어요. 따라서 학교안전 특히 등하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럼요. 동의합니다.

○**정을호 위원** 당연한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감소세였지만 윤석열 정권 예산이 집행된 2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23년 상임위에서도 교육부가 책임져 특교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라고 지적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학생안전에 위한 특교를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특교 중에 지역현안 특교 중 교육시설 개선 사업은 긴급시설 개보수, 통학로 정비 등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는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교부액이 꾸준히 증가해 전체의 62.5%까지 확대됐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학생안전 특교가 35.2%, 반 토막이 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축소된 학교시설 개선 사업 특교를 살펴보니 윤석열 정권에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정권 치적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라는 부분에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보니까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2000개소 이상이고요, 승하차 공간조차 없는 학교도 수백 곳에 이르고 있어요. 이런 곳에 사용해야 할 돈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정책처하고 다른 곳에서 지적한 바 있거든요, 이런 곳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학생안전에 투여돼야 할 예산이 다른 것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 관련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 통학로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그 지역에서 신청이 있

어야 되는데 지역이 해당 지자체, 경찰청 막 다 협의해서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교육시설 개선 사업이나 이런 안전 관련 예산은 저희가……

○정을호 위원 이 특교가 줄어든 것은 맞잖아요. 학교안전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맞잖아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러니까 그게 신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 들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을호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교육발전특구의 문제점을 살펴보니 이게 설립하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취지도 보니까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취지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또 봤더니 이 부분은 조금 불균형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특구 신청조차 못 한 지역은 배제되었고 선정된 지역 간에도 지원금 차이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화면 보시면 실제로 경북·경남은 435억 원을 받았지만 전북·전남은 204억 원에 그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 지역 차별이라고 저희가 말은 안 하겠지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집중 지원이 이루어진 결과 교육특구가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는 차별특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좀 고르게 가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 내용은 신청 지자체 수로는 호남 지역이 적지는 않은데……

○정을호 위원 비슷하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단가를 좀 적게 신청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금액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또 일례로 이주호 전 장관께서 모범 사례라고 치켜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부산형 통합늘봄 사업에 56억 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집행은 고작 13억 원, 24%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도 안 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사례는 학생안전이라든가 특교를 줄여 가면서 정권 치적 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지금 안 됐다는 부분들 차관님께서 다 살펴봐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안전 특교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집행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윤석열표 교육특구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부당한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집행이 됐고 진행됐는지 살펴봐 주시고 2주 이내에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저희가 살펴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해야 될 방향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의원실과 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을호 위원 아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봤는데 특교 받으신 지역의 의원님들을 보면 나름대로 윤석열 정권 내에서 실세라고 언론에 거론된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특교가 특교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차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영어유치원 관련된 사교육 굉장히 나름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7세 고시반 이런 말씀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실증적인 연구들도 이게 아동학대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부에서 24년에 유아 사교육비 관련된 조사를 5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걸 모두 다 집행했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가 시험조사를 했고요. 시험조사지만 그 통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도 많다 생각하고……

○**강경숙 위원** 많이 있습니다.

사교육비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3개월에? 3개월 집계를 해 보니까 8154억인가 그보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1년으로 환산을 하면 한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기타 부담 같은 것들을 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가계 부담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요. 게다가 저출생 시대에 유아 영어학원이 점점 늘어서 지금은 840여 개소에 다다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비용의 과도한 비용의 교습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그럴 텐데요. 현재 이것 규율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관련된 정책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려고 이 법을 냈는데 교육부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지켜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은 2017년에 유아 사교육비 첫 시험조사를 했고, 그때도 본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듬해에 한다고 해 놓고서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시험조사를 했지만 본조사를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사의 품질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공표 대상에서도 제외됐거든요, 본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정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이런 시험, 그러니까 조사 단계에서도 그러지 못한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건대,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엔 이 예산에 관련된 건 어떻게 됐어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현재 정부안에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13억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받지 않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제가 이것 증액 요구할 것이거든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도·점검 관련한 것인데, 올해의 신규 대책을 보니까 학원 지도·점검 강화라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뭔가 전수조사도 하고 8월 1일까지 결과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도·점검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강경숙 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한계가 많더라고요.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기는 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이른바 적발된 학원이나 교습소의 대부분을 보니까 벌점을 부과했다든지 시정명령을 했다고는 행정지도 이런 것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뭐니까, 이게? 솜방망이 처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늉만 내고 제대로 이걸 잡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을. 게다가 영어유치원 이제 4세 고시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국가가 이걸 개입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까지 왔다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 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본조사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기도 하는데 매년 정기조사를 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실제로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새롭게 장관님 차관님 다 들어오셨으니까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오죽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걸 들여다본다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K-컬처 너무 좋은데 교육에서는 사교육이라고 하는 너무나 이상한 제도들이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런 위원회에서도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까지 편성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예산이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되지 않았는데 혹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조사까지 해서 진단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일단은 국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정부의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국가시책 사업은 또 연속적으로 쓸 수는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거나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차관님, 지난 19일에 서울시교육감님이 교육부에 교원 정원 배정 재조정을 요구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진선미 위원 그 과정 속에, 저희 지역구인 강동구가 학생이 너무 늘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 강동구 안에서도 어느 쪽은 굉장히 줄고 어느 쪽은 늘고 이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정책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지역에, 우리는 지금 일인당 학생 수가 증가되는 초등학교 수가 9개나 되거든요. 그리고 강일 쪽에는 학생들이 너무 늘어서 아예 별도의 도시형캠퍼스, 그러니까 교육부의 정책이 학교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하려고 도시형캠퍼스를 해서, 모듈로 지금 교실들을 증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각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좀 반영해서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서요. 이번에 그 제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쯤 정밀하게 논의해서 교원수급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계신지.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일단은 최근 3년간 전체 교원 정원 자체가 너무 감축이 많이 돼서 학교가 다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기초학력이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편차도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선을 다해서 행안부랑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앞으로의 추계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결국은 전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정 속에서 교원들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고교학점제나 이런 식의 교원들의 충분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혹여라도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미리 알려 주시면,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각 학교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학평가 관련해서요. 사실은 작은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너무 줄기 때문에 대학들을 재정비하고 재조정해야 된다,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그 학교의 상황에 본인들이 휘둘릴 수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학교를 가게 되는 학생들의 상황은 다 천차만별일 거라서 그런 식으로 학교가 평가인증에 문제가 돼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몇 개 학교가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진짜 좀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량지표, 그러니까 계속 기준에 맞춰서 신입생이 제대로 덜 들어와서 거기를 불이익을 주면 또 불이익을 받으니까 학생이 더 안 가겠지요. 그러면 아예 그 학교 문을 닫게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계속 개선을 권고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은 그 학교의 재학생도 영향을 받을 거고 신입생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대교협에서 평가원의 관련된 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하세요.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진선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중에 이 개선은 보다 더 반드시 돼야 되고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연계에 불이익을 주세요. 그러면 신입생들이 들어갈 때 본인이 거기 학교 가는 것도 그런데 그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제한이 되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고, 지금 곧 또 입학 상황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에 늦지 않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좀 확인하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은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자금이나 장학금 대출 제한 대학들이 나왔고요. 그런데 2022년부터 개선을 해서 이것을 대교협의 평가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평가가 아니라 대교협 평가가 더 권위 있는 평가고 민간 자율의 평가고 그런 면이 있어서 넘겼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대교협은 그렇게 고부담 평가를 하지 않다가 고부담 평가를 맡아서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건의를 하기는 한 거지요.

그런데 학령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연계하는 것은 학교가 좀 선제적으로, 정원을 못 채울 것 같으면 정원을 좀 줄여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책 방향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교협 평가가 5년간 이루어지는데 앞에 받은 그런 대학, 5년간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1년 갑자기 이것을 바꾸기는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이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조치는 규칙을 개정하거나 뭘 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다른, 그러니까 4기 평가기준에서는 애를 또 뺐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을 빼는 건데 그 직전이라고 해 가지고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강요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차관님, 교부금 피담 얘기 들어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고 많은 분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다는 얘기가 있

어요. 이게 교부금 괴담이에요.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가량은 남는다고 얘기하시고 절반 가량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고, 왜 그러는지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시각이 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정복 위원** 시각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부금 배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24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금 미교부액을 좀 따져 봤는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2024년도에 얼마인지 기억하시지요? 21조 9900억 원입니다. 그중에 2024년도의 미교부액,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감액된 게 1조 2582억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감액된 거지요.

그했는데, 경기도 학생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학생 수요?

○**문정복 위원** 예, 유·초·중·고.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

○**문정복 위원** 148만 명입니다.

그러면 혹시 전라남도의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19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2024년도에 인건비 구조조정 1위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대략 1333억 원. 시설비 구조조정 1위는 서울시입니다, 1790억 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

경기도의 일인당 학생 교육비는 얼마냐면 532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학생의 일인당 교육비는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훨씬 많겠지요.

○**문정복 위원** 훨씬 많습니다. 927만 원입니다. 1위를 차지하는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학생 교육비가? 경상북도입니다, 989만 원. 이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교부금의 액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배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배분합니까? 학급 수로 해서 배분하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기본으로 합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게 배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기금에서 전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경직성 경비가 73%나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교사들 인건비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돼 버리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지금은 어찌 되었던 교부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경기가 활성화돼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통교부금의 배분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방교육청의 예산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를 보고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러면 산식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학급 수로 계산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정리하고 적어도 학생 수 곱하기 지역별 가중치를 부담시켜서 부족한 데는 많이 주고 좀 남는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생각 어떠세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를 산식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학급 수 할 때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더 주고 이런 방식의 약간 미세한 조정은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정복 위원** 좀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래야지 근본적인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학생 수의 대부분이, 50%가 집중돼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가 검토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시·도교육청과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문정복 위원님의 질의 집중해서 잘 들었고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공식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 교육예산 전체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를 발표한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내용을 보면서 내용 면에서 부실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 면에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는 바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총예산이 210조 원이라고 합니다, 추가 예산이.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한 116조, 기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재조정하겠다고 합니다. 116조, 한번 거기다 써 봐 보시지요. 이 중의 상당 부분을 어디서 감당하느냐?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결국은 교육에서 쥐어짤 거다, 딴 데서는 나올 데가 없다라고 합니다.

차관님,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구체적인 수치는 위원님께 지금 들은 거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지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재정 당국으로부터 재정 압박을 받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현재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조정훈 위원**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압박 받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압박을 받고 계신 게 맞지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아니, 압박이 없으면 그냥 다른 답……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구체적으로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경제……

○**조정훈 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중의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행안부가 교부하는 교부세하고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려 주는 교부금을 합치려고 해요. 그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것도 설치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 단호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교육위 위원님들도 단호히 반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합치게 되면, 특히 행안부의 교부세 비율을 19%에서 24%까지 올린다고 하면 교육예산 탈탈 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정복 위원님이 얘기한 서울 경기 전라도 경북 이 문제가 아니고 총 파이 자체가 줄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장관 임명도 전에 아쉽기 그지없고 다음 주에 있을 청문회서도 저희가 단단히 밝히겠지만 인적인 문제 그다음에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 교육예산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특히 문정복 간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예산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셨고 또 그 명분으로 고교 무상교육법까지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6년 예산 초안은 저희 야당에는 아직 안 주셨지만 상당히 삭감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예산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파이를 지켜야 그다음 나눠 먹을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눌 게? 그래서 저는 걱정된다, 야당으로서. 교육예산이 가장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희생양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수백만의 학생들과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책 중에 한 가지 제가 꼬집고 나가고 싶은 게 지난 추경 때도 얘기했던 대학생 근로장학금입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이라는 게 가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국가에서 주는 돈 공짜로 받지 않고 그래도 노동이란 걸 해서 근로란 걸 해서 받는 돈인데 추경 때 불용, 도저히 쓸 수 없다 그래서 1000억 감액한 것 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차관님, 교육 당국, 대한민국에 국가근로장

학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어려운 청년들이 더 이상, 일하기를 원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 1명도 없다 자신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 1000억 감액에 동의하셨어요. 저는 국가가 공짜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근로를 해서 노동의 가치를 알려 주면서, 가르쳐 주는 제도가 정책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교육부하고 한국장학재단 게으름을 감추려는 꼼수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1000억은 양보했으니까 26년 예산 올 때 반드시, 특히 교외장학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이나 자치단체에 일자리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데까지 확대하는데 일자리를 못 만들겠다? 이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하겠다는 소리 하고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근로장학금, 특히 어려운 친구들한테 주는 근로장학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반드시 방안을 마련해 오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를 뛰어넘었는데 혹시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러시면 간사님 끝나고, 예정은 간사님이 예정돼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요. 야당이 되시긴 되셨어, 교육부 예산 지키자는 것 보니까.

그런데 이게 하여튼 여야가, 사실 야당 때도 교육부 예산 지키자 그러다 또 여당 되면 약간 보수적으로 되는데 그게 사실 기재부 논리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야 위원님들은 그래도 교육부 예산 지키자는 쪽으로 사실 많이 공감할 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항상 긴축재정이다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야당 때도 굉장히 투쟁적으로 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못 할 거예요, 아마. 다만 서로의 입장도 있고 모든 위원님들은 교육부 예산 지키자는 쪽의 취지니까 잘 협치해서 교육부 예산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특히 기재부가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예산 줄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논리를 차관님께서도 잘 극복하셔서, 학령인구가 줄지만 학교의 다양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역할 분담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뿐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1분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조정훈 위원** 교육부 예산 모든 게 다 방어 대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저축할 데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해야 교육예산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원 한 푼도 모든 예산을 우리는 완벽하게 잘 쓰고 있다 이런 주장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이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보를 해 주셔서.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정복 위원님하고 조정훈 위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질의를 하셔서 저도 조금 보태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교부금 통합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물론 교부금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교부금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아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의 교부금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교육부에서 참여하셨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지영 위원** 교육부의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교육부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그러한 방침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전달받으셨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서지영 위원** 국정기획위원회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저도 위원님처럼 기사를 보고 아니면 돌아가는 얘기로 들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제가 통보를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부금의 통합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행안부의 입장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장이 전혀 전달되지도 않고 교육부와 논의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교육부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교육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통합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돼 있는 제반 여러 부처와 그다음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합 논의해 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와도 상의하지 않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뉴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그러면 누구와 공론화하고 누구와 의견을 나누겠다는 것인지 이 정부의 입장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에서 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교육부는 교육부의 입장을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인수위를 안 거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장관도 공석이기 때문에 서지영 위원님이 야당 위원님으로서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교육위원들과는 국정기획 쪽이랑도 소통도 하고 우리의 의견, 아까 얘기했던 예산 삭감 이런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교육위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을 저희가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빨리 장관의 공석을 우리가 매우고 정상적으로 교육위가 가동이 되면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교육부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모두들 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회와 또 정부가 오늘 많은 좋은 의견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교육부에서도 감안해서 향후 정책을 잘 수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정확하게 12시 전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아까부터 다지고 있었는데 약간 어긋나긴 했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부금에 대해서는 여야가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이 왜 필요하고 선생님을 더 이상은 줄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백날 해도 숫자와 데이터로 보여지지 않으면, 증명해 내지 않으면 기재부의 논리에 그냥 후루룩 팔려 가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어떻게 넘어가겠지 할 때는 이제 지나 버린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논리도 만들고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수치화해서 설득해 나가고 또 국민들에게도 설명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조정훈 간사님을 비롯해서 야당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재사고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 쪽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아마도 교사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 그다음에 학교급식 조리사분들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좀 유념 있게 봤던 것은 청소노동자분들이세요. 그냥 즉자적으로 날씨가 덥고 힘들면 이분들이 아주 가장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시나,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하기 전에 좀 살펴봤는데, 보니까 올해 7월에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에 협조 요청 공문은 보냈습니다. 적절한 온도·습도 장치가 필요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도 부여해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려면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부족한 곳들은 이렇게이렇게 시정 조치해라’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실태 파악이 다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중고는 교육청이 대부분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큼 되고 있나 봤는데, 일단은 보냉기구가 지급됐는지 여부랑 휴게실 여부 이 두 가지만 살펴봤거든요, 시간이

위낙 짧아서. 보니까 보냉기구 지금 관련해서는 한 두어 군데 빼고는 아무도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기 시작하니깐 ‘이제 하려고 합니다’, 대답이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실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사립대학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걸 교육부가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대학들은. 그런데 사립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사립대학도 그렇고 늘 사각지대 있잖아요, 교육부가 완전히 관리감독을 하기도 어렵고 사립이기 때문에.

그런데 2022년도에 한 150개 학교 정도를 가지고 사립대학의 휴게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보완이 잘된 건지 지금은 괜찮은 건지 이것도 지금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현재 휴게시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제가 교육청에 제출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 제보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청에서 제출한 사진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럭저럭 공간도 좀 넓고. 그런데 실제 노동자분들이 보내 주신 시설은 보시다시피 그냥 맨바닥에다가 돛자리 깔고 거기서 누워서 좀 쉬시는 것 같아요.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그냥 박스들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국감 다가오는데, 저희 위원들이 실태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렇게 좋은 사진들만 보내 주시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렇게 왕왕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중고를 봤더니요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들도 상당수 있고요. 제가 어디어디인지, 몇 개인지까지는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설치되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현황 파악조차도 25년에 한 곳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했던 곳들이 많아요. 특히 서울·경기는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하고 있지만 21년도, 22년도에 파악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하더라고요. 이것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고민정 위원** 그리고 어떤 데는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데는 빠져 있고, 그러면 사립학교는 누가 이것을 점검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교육부가 사립 중고등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고.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고민정 위원** 그래서 이제 곧 국감이 다가오는데 휴게시설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제가 국감 때 다시 한번 점검할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가 끝났거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조정훈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박성준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총 11명의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교위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차관보 김영곤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소은주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감사관 김도완

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정책기획관 배동인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상임위원 정대화
사무처장 최수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중앙교육연수원
원장 이난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연석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한상신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사무국장 박주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송하중
연금사업본부장 김훈중